

李 “공급 절벽 메워라”… 인허가 단축·택지 확보 ‘총력전’

“부동산 거품 방지, 장기적 경기 침체 필요할 경우 법·제도까지 손질”
세제·금융 정책의 조화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2022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공급 절벽이다.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택 인허가 절차 단축, 택지 확보 등 부동산 공급 총력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지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더 방지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능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공급,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

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겠다”며 “특히 파격적인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계,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화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며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향후 국민의 의견을 들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서 정책 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들께서 또는 정치권에 제시하고 이런저런 좋은 제안과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또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나온 안이 바뀌었다거나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오라가 락이라고 표현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됐으면 좋겠다”며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 굳이 너무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들 또는 전문가들,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제도적 맹점으로 자주 거론되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이런 것도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리고,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국힘, 당협위원장 대대적 교체… ‘당원 투표’로 쇄신

위원장 임기 자동 연장 관례 깨
사고·교체 권고·활동 미흡 당협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 물갈이’에 당원 투표 등을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각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최고위원회가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방침을 정하면 본격적으로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조직 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장 대표 주재로 열린 바공개 최고 위원회의에서는 전날(12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보고한 당협위원장 교체 범위·방식을 논의한 뒤, 각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 의견 청취를 통해 다음 최고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조강특위는 전날 회의에서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당협위원장들을 재임명하지 않고 일괄 사퇴하도록 한 뒤, 당원 투

표 등을 통해 선출하는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당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당협위원장 임기를 자동 연장했던 관례를 깨고, 사실상 전체 당협을 사고당협으로 만들어 조직 정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는 장 대표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한 방송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싸우지 않았던 당협위원장은 이제는 교체할 때가 됐다”며 “그런 당협위원장이 또다시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반영하겠다”면서 당원 투표에 따라 새로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체 폭을 두고는 “지금 20%가 싸우고 있는데, 80%가 싸우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및 이재명 정부와의 싸움에 열중하지 않았던 분들, 놀다가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 있던 분들은 교체할 때가 됐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7조에는 당협위원장은 ▲전 당원 선거 ▲책임당원 선거 ▲당원협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현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 ▲기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한 방식 등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지정할 권한이 있으며, 당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셈이다.

현재 국민의힘 사고당협은 총 32곳으로, 이 경우엔 조강특위가 즉시 보강 작업을 할 수 있다. 지난 당무감사에서 하위 평가를 받아 교체가 권고된 당협은 총 27곳으로,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거쳐 사고당협으로 지정될 경우 새 당협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 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사고당협도 아니고 당무감사 하위권도 아니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활동이 미흡했다고 평가되는 당협이 있다”며 “후보자를 배출하지 못하거나 선거운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당협은 당무감사를 통해 최고위가 사고당협으로 확정하면 조강특위(심사) 범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당협위원장이 그냥 유임되는 결과거나 당원들에게 선출되는 절차로 하겠다고 최고위가 의결하면 전석이 사고당협이 된다”며 “32(사고당협)+27(교체권 당협)+α(플러스 알파)’에 대해 최고위가 결정해달라고 보고했고, 당헌·당규 절차대로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 청취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상 현역 의원과 비현역 당협위원장을 구분해 선출·교체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현역 의원도 이번 당협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2018년 조강특위는 현역 의원 21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했다.

다만 전면 재선출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장동혁 대표는 오는 26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데, 당에서 본인과 각을 세우던 비당권파들을 밀어내기 위한 ‘당협위원장 물갈이’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서예진 기자

이진숙 ‘5·18 재조명’ 포럼 강행… 민주당, ‘역사 왜곡’ 반발

5·18 왜곡 논란 제기된 발표자들
민주, 의원 제명 결의안 제출 예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뉴라이트 계열 단체와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행사를 주최해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에서 이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실시하고 이의원의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진숙 의원실과 새역사국민운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지하 대강당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을 주최했다. 행사 목적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관점의 첫 학술적 검토’이며 주제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다. 포럼에서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한 이영

훈 교수가 광주정신, 그 역사적 실체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주동식 호남대 안포럼 공동대표는 ‘5·18이 87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다’를 주제로 발표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 홀에서 민생입법 방해·5·18 역사 왜곡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포럼을 주최한 이 의원과 이를 제지하지 못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 폄훼의 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전박하고 저열한 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진숙 의원이 오늘 국회 도서관에서 5·18을 재조명하겠다고 관련 행사를 주최한다. 공동 주최 단체인 새역사국민운동은 물론이고 행사에 참석하는 이영훈·김용삼·주동식 같은 사람들도 학술 연구라는 거창한

이름에 기대 5·18을 근본부터 폄훼해온 장본인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5·18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다. 군사독재체력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사건”이라며 “총에 맞고 같이 찢려 우리 부모님이, 형제들이, 친구들이 쓰러져 나간 사건이다. 진보, 보수를 떠나 일말의 인간성이라도 있다면 5·18을 폄훼하고 장난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 이진숙 의원은 이제라도 행사를 취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라며 “민약 행사를 강행한다면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황정근 국회 도서관장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민생입법 방해, 5·18 역사 왜곡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다”고 했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황정근 관장이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번 행사 개최를 묵인한 것 아닌지 반드시 따져 묻

겠다”면서 “아울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장 대관 관련 규정도 더욱 엄격하게 정비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